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호

베러 투모로우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

COVID-19

천하의 조코비치도 '백신 장벽' 못 넘었다... 쫓겨나는 미접종자

박소영 중앙일보 기자

대한체육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실시 요구

신창용 연합뉴스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

성차별 스포츠 중계는 그만...KBS "성평등 올림픽 중계방송 보여주겠다" 선언

이하나 여성신문 기자

스포츠폭력

"체육계 관행"...세팍타크로 전 국제 감독, 선수폭행·강제추행해 실형

조민정 이데일리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 인권 시민사회 참여 시작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며,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스포츠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글 · 홍덕기 + 사진 · 동아일보DB



사진 출처: shutterstock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의 역사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스포츠 분야의 시민운동은 21세기가 되어서야 시작됐다. 2000년 5월 발생한 '장희진 수영선수 사건'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2002년 5월 스포츠 분야 최초의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가 창립하게 된다.

체육시민연대의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이다. 체육시민연대는 체육특기자제도로 인해 공부와 운동 중 하나만을 강요하는 기형적 엘리트스포츠 문화 속에서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둘째,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활동 등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일인시위 등을 전개했다. 또한 체육대학의 일상적 통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더불어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2019년 쇼트트랙 성폭력 사건과 2020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사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 및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셋째, '스포츠 인권 증진' 활동이다.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반전·반핵·평화 마라톤'을 4회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2007년 '동대문운동장 철거 반대' 운동,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및 친환경올림픽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최근, 체육시민연대는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다음 장 계속



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스포츠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며, 前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의 성과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분야 이슈의 의제화'다. 스포츠 분야는 한국 사회의 타 분야와 비교해 보수적·위계적·폐쇄적인 문화를 띠고 있다. 시민사회 운동을 하기에 척박한 문화 속에서 소수의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 단체는 스포츠 분야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실태를 고발하고 사회문제로 이슈화했다.

둘째, '연대와 거버넌스를 통한 대안 마련'이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체육시민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한 '스포츠 인권 정책 포럼'은 초창기 다양한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스포츠 인권의 헌장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9년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혁신위원회에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총 7차례에 걸쳐 인권 친화적 스포츠 문화 형성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 인사들을 주축으로 2020년에 '스포츠인권연구소'를 창립해 타 분야 시민사회 단체 및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스포츠폭력 근절 캠페인 '프로젝트 움직(Umjik)'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의 과제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안정성과 확장성'이다. 타 분야 시민사회 단체는 오랜 시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성과 규모를 키워왔다. 또한 예산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 단체의 경우는 규모도 작고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구성원 또한 전문성에 중점을 둔 학자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구성원의 확장성이 요구된다.

둘째, '사업의 다양성'이다. 스포츠 분야 시민사회 단체는 주로 기형적 엘리트스포츠 문화와 구조를 비판하고 정부나 체육단체의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에 치중해왔다. 건강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는 긍정적이고 대중적인 사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의 시민사회가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 교육, 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천하의 조코비치도 '백신 장벽' 못 넘었다 쫓겨나는 미접종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던 이유로 호주로부터 '문전박대' 수모를 당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우리 국경을 넘을 수 없다"는 호주 정부의 서슬에 시즌 우승 상금 110억원(2021년 기준)의 스포츠 스타가 추방 위기에 몰리자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백신 반대론자' 조코비치, 입국 거부 결정 뒤집기 힘들듯

6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조코비치 법무팀은 호주 출입국 관리소의 입국 비자 취소 결정에 대해 호주 연방 법원에 긴급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오는 10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코비치는 멜버른 난민 수용시설로 쓰이는 호텔에서 억류된다. 조코비치는 오는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밤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하지 못했다. 호주 정부의 엄격한 백신 미접종자 입국 금지 정책에 발목이 잡혔다.

소문난 백신 접종 반대론자인 조코비치는 2020년 6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다. 8일 CNN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발열 등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백신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오픈 조직위원회는 앞서 대회 공지를 하면서 '백신 2회 접종'을 참가 조건으로 적시했지만, 예외를 뒀다. 백신 접종의 심각한 부작용, 6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등 의료적 사유가 있다면 조직위의 별도 승인을 거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코비치의 '백신 면제권'은 출입국 관리소의 비자 심사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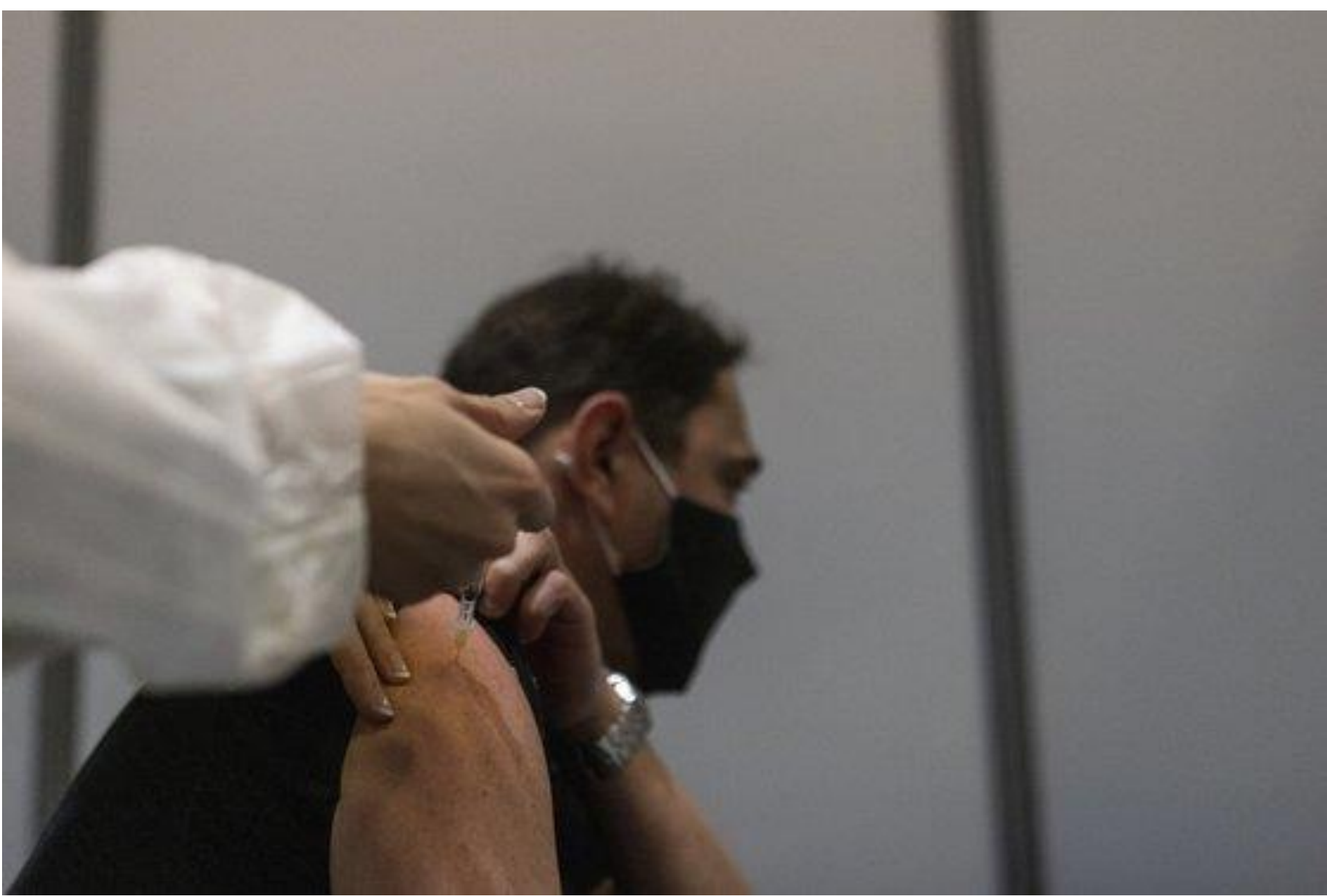
오히려 조코비치 사례로 인해 백신 접종 면제권을 가지고 호주오픈에 참가한 다른 관계자들도 전수 조사되고 있다. 7일 영국 가디언은 "호주국경수비대(ABF)가 호주오픈 때문에 입국한 사람 중 조코비치처럼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입국한 이들도 출국조치 당할 수 있다. 메리 크로크 시드니대 법학과 교수는 호주 NCA 뉴스와이어와 인터뷰에서 "조코비치의 (백신 면제권)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프랑스 방역패스 강화...이탈리아 50세 이상 접종 의무화

조코비치의 불운은 호주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입국 요건을 강화한 데서 비롯됐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호주는 현재 12세 미만 어린이와 백신 면제권을 받은 사람 외에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호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오미크론 쓰나미에 맞서 백신 접종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독려하는 추세다.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도 강화하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식당과 문화·체육시설, 교통수단 등 공공시설 이용 때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특히 그전까진 백신 접종 증명자, 코로나19 감염 회복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자 등을 전부 포괄하던 데서 음성 확인자를 제외하는 추세다. 즉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에서 회복됐다 해도 일정 기간만 방역패스 대상자란 얘기다. 이탈리아는 시행됐고, 프랑스는 이달 중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장 계속



일부 나라는 백신 의무화 정책을 내놨다. 의료 종사자·군인·공무원·교사 등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던 백신 의무화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5일 50세 이상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그리스는 오는 16일부터 60세 이상, 오스트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는 14세 이상 대상으로 백신을 반드시 맞도록 했다. 독일도 2~3월 사이에 백신 의무 접종을 하려고 한다. AFP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지난달 23일 세계 최초로 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바티칸 등은 이미 지난해에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신 미접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백신 접종 명령을 2번 거절하면 3600유로(약 500만원), 백신 접종 명령 거부 후 다른 사람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면 7200유로(약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는 위조 백신패스를 소지하면 징역 5년, 벌금 7만5000유로(약 1억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백신 미접종자들을 화나게 하고 싶다"는 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신념이다.

'백신 의무화' 꺼내는 이유, 빠른 대응처럼 보여

그럼에도 백신 강제를 인권 침해로 보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들 비판처럼 백신 접종을 과학·의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5일 TV 연설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집 밖에서 돌아다니면 경찰이 체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놔다. 그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거나 동물용 구충제를 주사하겠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며 '철권통치'에 백신을 결부시켰다.

옥스포드 백신 그룹 연구원인 사만다 밴더슬롯은 BBC와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은 '백신 의무 접종'이라는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학적 연구결과가 엄연한데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식으로 정치 세력을 불리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공공연히 조롱하면서 '반 바이든 진영'을 끌어모았다. 정작 그는 지난달 부스터샷 접종 사실을 공개해 지지자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호주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신세의 조코비치는 오는 5월 열리는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 참가도 어려울 수 있다. 프랑스오픈 조직위원회가 아직 참가 선수에 대한 코로나19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는 "프랑스오픈 행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거가 필요하다"고 올라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조코비치를 비롯한 백신 반대론자 스타 선수들이 점점 멸시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코비치 억류 사태를 지켜본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36·스페인)은 이렇게 말했다. "백신을 맞으라고 장려하거나 권고할 생각은 없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백신 접종 거부하는 자유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체육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실시 요구

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2022.01.06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인준 거부’ 최철원 당선자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 마지막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6 ondol@yna.co.kr

대한체육회는 4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조직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장 선거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2020년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치러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당선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최 대표의 과거 ‘맷값 폭행’을 문제 삼아 협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개선에 대한 체육인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철저한 윤리의식과 높은 도덕성, 청렴함 등 자격 요건이 중요시돼야 하므로 당선인의 과거 폭행 사건은 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인준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장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2월 10일 내려진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체육회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장 선거를 할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체육회는 ▲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1년 이상 회장 궤위 상태인 점 ▲ 최철원 당선인의 회장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 기각 ▲ 즉시 항고에 최종 기각 판결 등에 따라 조속히 협회 정상화를 이뤄 단체 운영 및 국가대표 등 선수 지원에 공백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임 회장 선출 계획을 수립할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성차별 스포츠 중계는 그만... KBS “성평등 올림픽 중계방송 보여주겠다” 선언

오는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KBS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방송단(단장 김기현 KBS 스포츠국장) 구성원 모두 성평등 교육을 받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평등 올림픽 중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KBS는 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KBS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방송단 전체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올림픽 중계’를 주제로 방송언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소치 올림픽부터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소녀와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가 스포츠라고 강조한 점을 알렸다. 최근 문제가 된 중계방송 사례를 들어 △선수에 대한 외모 평가 △여성선수는 ‘여자’로 분류하기 △누구의 ‘딸’ ‘아들’ 입을 부각하는 등 가족 관련 호칭 주의하기 등을 강조했다. 특히 KBS가 성평등 올림픽 중계방송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는 해설위원, 캐스터뿐 아니라 PD, 작가 등 방송단 전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는 대면으로, 일부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KBS는 “방송단 전원이 교육을 받은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점검하고, 돌발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방송사들의 올림픽 중계는 간혹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청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KBS가 성평등 교육을 마련한 건 이 때문이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다.

이번 교육을 마련한 서영주 KBS성평등센터장은 “무엇보다 이번 교육은 방송단의 제안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해 2021 도쿄올림픽 중계 당시 캐스터가 자막에 쓰인 성차별적 표현을 성중립적으로 정정해 호평 받았다. 양궁 여자 개인 32강전 중계하던 캐스터 강승화 아나운서는 선수 소개 과정에서 자막에 쓰인 ‘여궁사’라는 표현을 ‘궁사’로 정정했다. 그동안 여성 선수를 ‘여자’로 대하며 성차별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중계방송에 지친 시청자들은 강 아나운서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교육에 참가한 남현종 캐스터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표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특히나 외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피겨 종목에서도 한 마디 한 마디 모두를 포용하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표현을 쓰도록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라고 말했다.

KBS는 새로운 여성 캐스터들을 발굴해 스포츠 중계에 성별 불균형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KBS는 1TV, 2TV, 뉴미디어 등의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경기를 편성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공하는 등 공영방송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체육계 관행”... 세팍타크로 전 국대 감독, 선수 폭행·강제추행해 실형

자신이 감독으로 있던 실업팀 소속 20대 여성 선수들에게 상습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세팍타크로 전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상습폭행, 강제추행,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지난해 9월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결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A씨는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남자대표팀과 여자대표팀, 실업팀 감독 등을 맡으며 장기간 지도자로 활동했다.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을 채택하고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에도 관여하는 등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여자 실업팀 감독이었던 A씨는 선수들에게 “살 언제 뺄거냐?”, “술 많이 먹었냐”, “엉덩이 커진 것 같다”고 말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불러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면서 다리 안쪽을 손등으로 수차례 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이 중 피해자 B(20)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훈련 도중 피해자가 실수하거나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전부터 이어진 체육계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후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대표로 선발된 피해자에게 “네가 실력이 안되는데 내가 국가대표 시켜줬으니 매달 수당 20만원을 보내라”라며 현금을 갈취했다.

상습적인 폭행과 감독의 요구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1회에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A씨의 은행 계좌로 현금을 송금했다. A씨는 선수 3명에게 21회에 걸쳐 총 560만의 이익을 취하고, 그 밖에도 2차례에 걸쳐 43만5000원 상당의 지갑과 양주 등 금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독으로서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범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했다”며 “‘폭력 대물림’ 등 관행은 선수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악습일 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고, 선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차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더 이상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용인시, 생활체육지도자 18명 정규직 전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89478?ref=naver>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신규 기업 모집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1090501003&sec_id=530101&pt=nv

윤곡여성체육대상에 양궁 안산·배구 박정아...12일 시상식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97184&plink=ORI&cooper=NAVER

59년 전 지은 대전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 문화재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41400005?input=1195m>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쓰는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첫삽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104300052?input=1195m>

CGV, 영화관에서 이젠 체육관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집 '피커스' 론칭

<https://www.fnnews.com/news/202201060912253684>

실내체육관·컬링경기장... 전주 체육시설 확충사업 '순조'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06516641?OutUrl=naver>

"황선우X김아랑 선수대표 선서" 체육회, 5일 2022년 훈련개시식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1040100022190001211&servicedate=20220104>

순창군, 장애인체육관 건립 공모 선정... 2024년 하반기 개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690&cID=10808&pID=108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